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20일 (음력 8월 11일) 목요일

노동계, 현대차 광주투자 협상 공식 불참 선언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뒷전, 광주시-현대차 비밀협상 고집”

양대노총 참여 사실상 물 건너가…합작법인 설립도 차질 불가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단계로 주목받아온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사업에 대해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핵심축인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시·현대차 공동투자를 끝으로 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9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킨 광주시의 투자협상을 규탄하며 비통하고 짐담한 심정으로 ‘협상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은 뒷전 인 채 시민 모두를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 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고 있다는 판단에서도.

당초 최저 4000만원으로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평균 연봉이 주야 8시간씩 교대근무 해도 5년간 연봉이 반도파 수준인 2100만원 (직무수당 300만원 포함)에 그치고 노조 설립 5년간 제한설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노동계의 묵은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 공개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시가) 이젠 ‘최초위기다’. 노동계가 제발 협조해 달라’며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려 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7, 18일 양일간 산별, 사업장별 의견을 취합한 뒤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대차 투자 협상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민주노총도 일찌감치 현대차 투자 협상에 불편한 입장을 보이며 불참 기조를 유지해온 상황이라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를 기대를 모아온 현대차 투자 사업에 대한 양대

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 갔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 설립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콘트롤티워기인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도 양대 노총이 불참해 ‘반쪽 출범’한 상태다.

양대 노총은 단, 일선 노동현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최정열 수석부의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노동계가 적극 환영하는 사업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되 현대차 투자 협상은 광주형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불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협상은 한창 진행중이며, 임금 수준, 특히 초임액수를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시간적 갖고 지켜봐 달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모든 건 현재 논의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시와 현대차는 빛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

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은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돼왔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에 대한 현대차의 실질투자 실현을 민선7기 초반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이용섭 시장도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전제로 8월 중에는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소위 ‘잔비란 불기 전’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친문(친문재인) 주류 인사들의 구원 등판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약은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핵심 주체인 노동계마저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투자는 물거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은홍 기자

Photo 漫評

법의 잣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흡집내기 위해 신문사 친관을 도운 이운행 할평군수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화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사점이 6·13지방선거 2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한국노총 전남상담소 1일 노동법학교 개소

한국노총 전남상담소(소장 김영우)는 18일 한국노총 목표지역지부 3층 교육장에서 전남서부권 노조간부 및 조합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노동법 학교 교육을 실

시했다.

제1강을 맡은 한국노사법률원 신광교 원장은 강의에서 “노동쟁점은 언제든 있어 왔고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

전남 서부권 근로자 상대로
최저임금 산정범위 등 강의

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갑작스런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며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선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

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중복 할증문제가 현행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선 강한 반발이 있다”고 밝혔다.

신원장은 또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는 노사 공히 안전한 일터와 편안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노사가 하나씩 과제로 알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신 원장은 휴일근로수당, 특례업종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의 산정 범위 등을 심도 있게 강의했다.

제2강을 맡은 한국노총전남본부 이신원 의장은 “한국노총 전남본부 조합원과 함께 소통, 대화, 포용의 노사관계로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는 일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우리 모두의 삶이 비워지는 행복시대를 열어 우리 노동자가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도민숙의 노동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최남규 기자

남구 프리미엄, 그 위에 서다

조합원
모집중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

랜드마크의 시작

서동의 새로운 하늘,
남구의 新랜드마크

특급 그린라이프

단지 바로 옆 광주공원
친환경 단지

원더풀 프리미엄

선호도 높은 중소형에
800만원대 획기적 가격

교육 프리미엄

단지 옆 초중고교에
남구의 든든한 교육환경

사통팔달 교통

광주 전역 어디든
쾌속 광역교통망

관리비 절감

광주 최초
태양광발전 아파트

혁/신/평/면
59㎡ / 84㎡

문의
062)

675-0100

사업주체: (주)서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 시공예상: (주)리채 | 입주대상: (주)올이씨엔디 | 자금관리: 국 제자산신탁

▶ 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